

이민의 정치경제학

조 현 구 (한국민족연구원 연구원)

한국에서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지위나 제외 한인 교포들에 대한 논의는 법률적, 세부적인 절차와 인도주의 혹은 민족주의적인 감성사이를 극단적으로 오가는 듯 보인다. 이러한 원칙적인 감성과 구체적 실행 사이의 공간이 크면 클수록 합리적인 정책의 도출이나 그 일관된 실행이 어렵다는 것은 자명하다. 문제를 제대로 프레임해서 일반적인 감성이나 정치적인 성향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연결시키는 일종의 거름 틀이 없기 때문이다. 세부적인 사항에 매몰되거나, 유동적이고 때로는 편향적인 감성에 휘둘리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 연결 체로서의 거름 틀, 다시 말하면 이해관계에 기반한 문제의 인식체계가 필요하다. 이 글은 앞으로 점점 더 국내정치문제에서 볼거릴 수밖에 없는 이민 문제가 국제적으로는 크게 어떠한 인식 틀 속에서 분석, 대응되고 있는 지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세계화 속에서의 이민 문제

지금 소위 세계화를 분석하는 많은 연구들이 그 정체를 규명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19세기말 20세기초 영국을 중심으로 진행된 세계화와의 비교를 하고 있다. 20세기의 세계화를 하나의 동떨어진 현상이 아니라 근대이후 지속되어 온 통합이라는 조류 속에서 파악하는 것이 오늘날의 세계화의 특징 ? 과거와의 공통점과 차이점 ? 을 보다 분명히 부각시킬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가 된다. 또 이러한 지속성 사이에 나타난 단절의 역사에서 왜 운송비용의 하락이나 정보통신의 급격한 발전 등 기술적인 혁신이 필연적으로 세계화를 가져오지 않고, 개별국가들의 정책적인 선택으로 큰 흐름 자체가 결정되는 지가 명백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먼저, 이러한 비교에 있어서는 크게 세 가지 통계치 - 무역통합, 금융통합, 인구이동 - 가 두드러지게 강조된다. 적어도 이러한 수치상의 비교에 있어 오늘날의 세계화는 100년 전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전세계 생산량 중 국가간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국가간 투자규모의 대 GDP 비율만으로 보면 오늘날 세계화는 전혀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심지어 여기서 살펴보고자 하는 이민의 문제 또한 약 100년 전에 이미 가장 큰 양적 변화를 겪었다. 경제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1815년 이후 약 100년간 역사상 가장 큰 자발적 인구이동이 일어났다. 유럽인구의 약 6천만 명 이상이 아메리카 대륙과 오세아니아,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으로 이동했고 약 천만 명 정도가 러시아에서 중앙아시아와 시베리아로, 1천2백만 명 이상의 중국인과 6백만의 일본인이 아시아의 도처로, 그리고 1백5십 만 이상의 인도인 역시 동남아시아, 서남아프리카 등지로 이동했다. 이러한 19세기의 급격한 인구이동은 1890년대에 들어서 그 최고조에 이르러 미국에서만 10년간 인구가 9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현상을 보인다.

그렇다면 두드러지는 차이점은 무엇인가? 지리적인 영역의 확대와 무역, 자본이동의 구성요소에서 그 차이가 드러난다. 많은 경우 19세기말의 세계화에서 제외되었던 지역 ? 아시아, 아프리카 ? 이 현재의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또 1900년에 세계무역의 약 70퍼센트를

점유하던 1차 생산품이 이제는 약 2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고, 자본이동에 있어서도 장기적인 개별 채권 투자의 형태로 이루어지던 해외투자의 양상이 몇몇 은행을 중심으로 한 신디케이트 론의 시대를 거쳐 이제는 단기 자본이동, 해외직접투자가 큰 폭으로 확대된 경향을 보인다. 개별 국가들의 경우, 무역 대 GDP 비중으로 볼 때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이 100년 전 상황보다 더 개방적인 경제구조를 나타내고 일본의 경우에는 오히려 개방정도가 100년 전보다 낮아진 상황이다. 재미있게도 가장 무역의 개방정도가 높아진 것이 미국 (1910년의 11퍼센트에서 1995년의 24퍼센트)이라는 사실이다. 이러한 통계적인 차이에서 오늘날 다른 나라들에서보다 세계화의 중심에 위치한 미국에서 그에 대한 반작용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요인의 일면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100년 전과 비교해 볼 때, 현재의 국가간 인구이동은 다음과 같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그 절대수의 비교에 있어 현재의 이민들의 수는 100년 전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1990년대에 들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이민자의 수는 2000년을 기준으로 볼 때 약 1억5천만 명, 세계총인구의 3퍼센트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1990년대 10년간 미국은 이민들로 인해 4%의 인구증가가 나타났고, 실제로 1989년과 1998년 사이에 매년 약 1백만 명의 합법적 이민과 약 5십만 명의 불법이민이 미국으로, 약 1백2십만 명이 합법적으로 약 5십만 명이 불법적으로 EU국가들로 이동해갔다.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진 선진국가들에 있어 1990년대의 인구성장은 전적으로 이민들의 도착에 기인하고 있다. 과거 100년 전 세계화에서 나타난 국가간 인구이동이 주로 유럽의 저소득층의 신대륙을 향한 이동이었던 데 비해, 현재의 상황은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이동이 그 주류를 이룬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차이는 지리적인 거리의 장애가 점점 사라지면서, 이민을 꿈꾸고 가능하다면 불법적으로라도 이민을 통해 자신과 가족의 운명을 바꿔보겠다는 생각을 지닌 사람들의 수가 이전시대에 비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난 데 있다. 100년 전의 상황이 제도적인 통제가 약한 상황에서의 자유로운 이동이었다고 한다면, 오늘날과의 절대적인 수치 비교 자체는 무의미하다. 이민을 원하고, 할 수 있는 인구수의 풀이 커진데 반해 받아들이는 쪽의 상황은 정치적으로 점점 더 악화되고 통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1997년에 있어 미국이 약 7십3만7천명의 이민들을 개도국으로부터 받아들였고, EU가 약 6십6만5천명을 받아들였다. 이들 수치는 잠재적인 이민 가능 자들의 0.05%에도 미치지 않는다.

이민자문제의 경제적 함의

이렇듯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인구이동은, 떠나는 모국이나 받아들이는 수입국 모두에서 경제적인 변화를 수반시킨다. 개도국에 있어 최근의 이민양상은 고등교육을 받고 기술수준이 높은 고급인력의 유출 경향을 보이면서, 모국에서의 인적자원의 공동화양상을 불러일으키고, 그 반대 급부로서 해외에 거주하는 교민들로부터의 송금이 점점 더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형태를 띤다. 이민을 받아들이는 선진국의 입장에서 보면, 기존의 복지국가의 운영에 변화를 초래하는 조세 원의 변동, 자국의 저소득 임금노동자들의 실업률의 증가 등의 문제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러나 먼저 이러한 이민의 양 측에 있어서 나타나는 경제적인 변화를 살펴보는 데 앞서, 세계경제에 있어 인구이동 자체가 갖는 의미부

더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신 고전경제학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오늘날의 세계화는 전 지구적인 소득수준의 향상과 부국과 빈국간의 격차를 점차 완화시키는 올바른 방향으로 인식되고 있다.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과 시장의 확대가 평균소득과 국가간 소득격차를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이러한 인식은 다음과 같은 이론적 근거에 기반 한다. 즉 전 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볼 때, 자본은 노동비용이 싼 개도국으로 더 큰 이윤을 찾아 이동하고, 반대로 개도국의 노동자들은 보다 높은 임금을 찾아 선진국으로 이동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도국의 임금수준이 점차 상승하고, 선진국에서의 임금수준의 상승이 노동의 유입으로 압박되면서 두 축간의 자본, 노동 비용이 ? 그 결과로 소득수준이 - 점차 수렴해 가는 것이다. 개도국에서 필요한 자본의 유입, 그리고 시장의 확대는 보다 가난한 국가들의 경제가 이미 높은 소득수준에 도달해 있는 선진국에 비해 빠른 수준으로 성장할 것을 예측한다.

그러나 물론 현실이 이러한 이론적 단순화에 맞춰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최근 반세기에 있어 세계의 평균소득이 증가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소득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고, 아직도 약 20억 이상의 인구가 하루 \$2 미만으로 살아야 하는 실정이다. 세계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1970년에서 1995년 사이에 소득수준 상위 삼분의 일의 국가들의 연평균 개별국민소득은 약 1.9 퍼센트, 중간의 삼분의 일의 국가들이 0.7 퍼센트의 성장을 보인 반면에, 저소득의 나머지 삼분의 일의 국가들의 연평균 소득성장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전세계인구의 약 15 퍼센트를 차지하는 선진국에서 세계 GDP의 약 60퍼센트 이상을 생산하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이 수치는 이론적 모델을 심각하게 다시 생각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신고전적 이론이 현실과 동떨어진 중요한 차이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초를 다루는 금융자본의 세계화라는 거대한 명제 앞에서도 우리는 아직도 대부분의 금융자본의 이동은 선진국간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또한 세계대전 이후 50년에 걸쳐 도도하게 이루어진 무역자유화에 있어서도 최근 미국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농산물 등 개도국의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자유화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결정적으로는 모델에서 상정하고 있는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 중 노동력의 이동이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하버드 대학교의 Bruce Scott(Scott 2001)이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러한 문제들은 상호 연결되어 모델에서 상정하고 있는 개도국의 발전을 막고 있는 요소가 된다.

국경을 뛰어 넘어 억압적이고 기회가 없는 모국의 상황을 도피할 수 있는 선택이 원천적으로 부정된 상황은 개도국의 정치형태가 좀 더 유권자들의 이익에 맞추어 변화하는 조건을 악화시키고, 이렇듯 아직까지도 국경이 의미하는 일정정도의 격리성은 개도국의 지도자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의 자본주의의 발달에 필수적인 법의 지배, 인프라의 구축, 금융제도의 정착 등 큰 사회적인 변화를 지연시킬 수 있게 하여, 외부로부터의 자본의 유입의 유인을 상실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Bruce Scott의 연구에서 보여주듯, 미국의 남북전쟁이전의 남과 북의 소득격차의 확대, 전쟁 후 소득수준의 수렴의 역사를 살펴보면, 일자리를 찾아 남에서 북으로 대대적인 인구이동이 있는 후에야 두 지역의 소득수준이 수렴해 나

아갔다. 신 고전경제학에서 제시하는 발전과 수렴의 동인으로서의 생산요소의 가격수준의 차이는 현실에서는 좀처럼 좁혀지고 힘든 구조를 띠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이민들의 모국과 수입 국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경제적인 변화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앞에서 잠시 언급된 바와 같이, 이민들을 떠나 보내는 개도국들의 입장에서는 젊은 고급인력의 유출과 그에 따라오는 조세 원의 축소가 문제로 지적된다. 실제로 인도의 경우 2001년에 약 1백만 명 이상의 인도인이 합법적으로 미국에 살고 있고, 그 중 대부분이 한창 일할 나이의 고등학력의 소유자들이다. 인도 전체인구의 약 0.1퍼센트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들 소수의 인도인들이 벌어들이는 소득이 전체 인도 국민소득의 10퍼센트 가까이를 차지한다는 놀라운 통계에서도 현재의 인구이동의 경제적 동인은 충분히 드러난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인력유출에 따른 조세 원의 축소로 인도의 GDP의 약 0.25퍼센트 정도의 재정수입의 감소가 일어난다고 보고 있다.

좀 더 일반적으로, 세계노동기구의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몇몇 개도국에서는 고급인력의 약 30%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많은 경우 다시 모국으로 돌아오지 않는 양상을 띠고 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러한 인력의 유출이 모국정부에 재정적인 도움을 주는 것 역시 분명한 사실이다. 한 예로 알바니아의 경우, 전체 수출액의 약 75%에 달하는 액수의 송금이 해외의 교포들로부터 들어오고 있고, IMF에 따르면 개도국 전체가 이렇듯 해외에서 송금으로 받는 금액이 일년에 약 6백억 불, OECD국가 전체로부터 받는 공식 원조금액보다도 약 60억불 가량이 더 많은 수준에 이르러 있다.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렇듯 고국의 가족에 보내지는 금액의 상당부분이 기초생활에 필요한 주택 등의 비소비재에 투자되고 약 3-4배의 경제적 부의 창출효과를 가지고 온다고 한다. 전세계 개도국으로의 직접투자의 1/3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의 경우에도 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직접투자자금의 약 75%가 해외의 화교자본이라는 점을 보아도 이러한 이민들이 모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이미 지엽적이고 개인적인 수준을 넘어 선지 오래다.

다음으로, 문제의 다른 한 축인 선진국내에서 새로 밀려들어오는 이민들이 불러일으키는 경제적인 변화 역시 간과할 수 없다. 국내의 점점 강화되는 정치적인 저항은 논외로 하더라도, 서구 선진국들이 20세기 후반에 발전시킨 복지국가의 유지와 자유로운 이민의 허용은 경제적으로도 양립하기 어려워 보인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이민의 양상은 일반적으로 볼 때 선진국 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는 듯 하다. 특히나 받아들이는 선진국의 입장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고급인력이 아닌 개도국의 저 학력, 저 기술의 노동자들의 유입이다. 세금 원을 증가시키기보다는 사회복지제도의 지출을 확대시키는 쪽으로 작용하는 이러한 노동자들의 이민은 복지제도에 압박을 가할 뿐 아니라, 국내의 저소득 노동자의 임금수준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기 때문이다.

일련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현재가치로 환산했을 경우 일세대의 이민 한사람당 약 3000불 정도의 재정적 손실이 나타나고, 2세대로 가면 일생동안 약 8만 불의 재정수입 확대가 예상된다. 출산율의 저하로 인구의 감소가 이미 시작된 선진국의 경우, 장기적인 안목에서 본다면 이민의 재정적인 함의는 부정적으로만은 보기 힘들다는 얘기가 된다. 하지만 이민2세대의 재정적 기여를 염두에 두고 당장 복지제도에 압박을 가하는 자

유로운 이민정책을 취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사실 이민 2세는 이미 자국민으로 간주하게 되므로 그 비교대상이 다른 이민자가 아니라 내국민들이므로 이들간의 조세기여도의 차이에 기준을 맞추어 평가해야 한다. 그리고, 이민 2세들이 성공적으로 선진국사회에서 통합하고 경제에 기여하는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 그 부모세대가 고학력, 고소득이라는 점을 상기하면 복지국가제도가 자유로운 이민의 확대에 장애가 되고 있는 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민들의 또 하나의 부정적인 영향으로 제시되는 것이 국내 저소득층의 실업률 확대와 임금 하락이다. 미국의 경우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들어 고등학교를 마치지 못한 학력의 국내노동자의 실질임금이 약 2분의 1가량 하락했고, 그 중요한 이유의 하나로 바로 값싼 해외노동력의 유입이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전체 경제의 틀에서 봤을 때, 고등학교 미 졸업자가 차지하는 노동시장의 규모는 전체의 약 10%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이들의 임금의 하락으로 인한 국내물가상승의 저하 등 거시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일면 긍정적인 반작용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므로 이 문제는 딱 떨어지는 해답이 없어 보인다. 실제로, 이 문제에 천착하는 많은 경제학자들은 이민들이 임금이나 국내의 직업 등에 특별히 눈에 띄는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더 놀라워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듯, 떠나보내는 개도국이나 받아들이는 선진국 경제에 있어 이민이 가지는 경제적인 순 효과 (net effect)는 딱 떨어지게 긍정이나 부정으로 결론이 나지 않는다. 고학력 인구의 유출을 걱정하는 소리가 개도국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의 존재는 개도국이나 선진국 모두에서 별 불평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고, 오히려 선진국 쪽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들의 이민을 장려하는 정책을 펴나가기도 한다. 문제는 저 학력, 저 기술의 인력들의 이동이 선진국 사회에서 일으키는 반작용에 있다. 선진국의 이민제도 자체가 원칙상 고학력의 인력을 끌어오는 쪽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이민들과의 관계? 가족관계, 사업관계? 가 가장 중시되는 형편이다 보니, 이 문제는 별 해결될 양상을 보이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위의 여러 가지 경제적 손익분석에 따르면, 가장 혜택을 받는 것은 개도국, 선진국 등의 정부가 아니라 바로 이민 그 자선들이다. 미국에 있어 그린카드를 획득하는데 성공한 이민들의 경우 이전과 비교해서 연소득 약 2만 불, 현재가치로 환산한 평생소득 약 30만 불의 차이가 나고 있다. 이러한 소득의 급격한 증가는 고학력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므로, 끊임없이 위험을 감수하고 국경을 넘는 모험은 계속된다.

이민자 문제의 정치적 함의

해외에 존재하는 이민들의 존재가 고국의 정치에 의미를 가지기 시작한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 전통적으로 이들은 이민 간 국가의 정부를 상대로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노력해왔다. 자신들의 존재가 이민 온 국가에서 일정정도 인정을 받는 수준에 이르면 그 다음 단계로 나타난 것이 이민 온 국가를 상대로 떠나 온 모국에 유리한 정책을 쓰도록 압박하는 형태의 정치행위이다. 국가나 자국을 이렇듯 이렇듯의 모습에 대항한 이민자들도 있다.

‘유민’(diaspora - 모국을 떠나 타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으로 일컬어지는 이민 사회는 점점 더 그들이 물리적으로 떠났을 망정 심정적으로는 머물고 있는 모국의 정치상황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러한 정치적 영향력의 행사가 가능해진 데에는 이들의 경제적 힘이 그 근처에 깔려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한 예로 1991년에 구 유고연방에서 독립한 크로아티아의 경우를 보자. 유럽의 공산주의가 붕괴했지만 유고연방은 존립하고 있던 1990년대 초반, 크로아티아에서는 외국에 살고 있는 교포들에게 모국으로 돌아오라는 호소가 계속되었다. 몇몇은 돌아와 1991년에 발발한 내전에 참가했고, 돌아오지 않은 채 외 크로아티아 교포들은 3천만 불에 달하는 성금을 모았다. 한편, 독일에 있던 크로아티아 망명자 단체는 독일정부에 강력한 로비를 지속했고, 일정부분 그 결과로서 유럽연합의 크로아티아 조기 인정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열렬한 민족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이러한 망명자 단체들은 1990년에 실시된 선거에서 민족주의를 강력히 표방하고 나선 Franjo Tudjman의 진영에 적어도 4백만 불이 넘는 기부금을 헌납하고 그 대가로 1992년 크로아티아가 독립한 후 국회에서의 의석을 보장받았다. 총 120석의 의회에서 12석이 재외교포사회에 할당된 것이다. 그들은 거주 국에 있는 영사관이나 Zagreb (크로아티아의 수도)에서 지정한 교포단체 회관, 클럽, 혹은 교회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이에 반하여, 크로아티아 내에 거주하는 소수민족에 대해서는 7개의 의석만이 부여되었다.

크로아티아의 경우는 특별하다고 하더라도 결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인 조류에서 동떨어져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개도국 정부에서도 현 상황으로 볼 때 물리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인력유출의 통제 대신 점점 더 이들의 돈이나 전문적 능력을 활용하는 데 조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모국방문 모임 등의 구성을 통해 이들과의 감정적인 유대를 강조하고 결국에는 보다 더 많은 돈과 기술을 모국으로 돌려줄 것을 암묵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두되는 흥미 있는 정치적인 변천은 다름아니라 돈에 대한 구체적인 대가로서의 모국에서의 투표권이 제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가령 멕시코, 크로아티아, 에리트리아 (Eritrea: 아프리카 북동쪽 이디오피아와 수단에 국경을 접한 신생 독립국)뿐 아니라, 아르메니아와 인도가 교포들의 투표권을 약속해놓았다. 해외에 거주하는 필리핀 인들도 투표권부여를 원하고 있다. 에리트리아(Eritrea)와 멕시코의 경우처럼, 터키 역시 해외 동포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도록 헌법을 개정하였지만, 터키 이민들이 밀집해 있는 독일 정부는 자국 땅에서 외국의 선거가 열리는 것을 탐탁지 않게 보고 있다.

이 밖에 다른 나라들은 해외교포들의 정치적 에너지를 활용하는 색다른 방법들을 고안해내고 있다. 이 분야에 있어서는 에리트리아(Eritrea)가 가장 선도적인 예가 될 것이다. 1993년에 치러진 독립국가 안에 대한 투표에 해외동포 중 선거가능자의 90%가 투표권을 행사했을 뿐 아니라, 그 후 이들은 향후 선거에 있어 그들의 투표권을 담보하는 헌법제정에 일조 했던 것이다. 터키의 예에서 볼 수 있듯 실제로 교포들의 귀환을 유도해내는 방안도 등장하고 있다. 현 집권세력인 터키의 회교도당 (Turkey's Islamist Party)은 해외에서의 자금조달에 대한 반대급부로, 교포사회의 지도자들을 당선안정권의 선거구에 공천하기도 했다. 이 중에서도 가장 교포사회로부터의 인재 도입과 발탁에 열정적인 것은 발틱 국가들이다. 1991년에 독립을 선언한 후, 에스토니아는 두 명의 외무장관, 한 명의 국방장관, 그리고 외무부를 비롯한 정부기관의 수많은 공무원들을 해외교포사회에서 발탁했다. 라트비아의 현 인기 높은 대통령은 캐나다에서 건너왔고, 전직 국방장관 (제미라트비아인), 많은 수의 국회의원, 외교관등이 해외에 흩어져 있는 교포출신이다. 다른 발틱 국가에 비해 민족주의 성향

이 약한 리투아니아의 교포사회 역시 전직 대통령을 비롯, 현 비서실장 (모두 제미라트비아인 출신), 그리고 많은 역사학자나 소설가, 시인 등을 배출했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들이 결코 손쉽게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하지만, 그 동시에 그 영향력이 과대 평가되는 것에도 주의해야 한다. 해외의 유민들이 단순히 그들의 영향력만으로 모국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을 모국정부로 하여금 취하게 만드는 일은 거의 없다. 결국 새롭게 등장하는 이들 이민집단의 영향력의 핵심은 모국의 이익과 그들의 거주국의 이익은 점점 더 혼합시키는 힘, 그로 인하여 그들 자신의 이해관계를 모국의 상황에 반영시키는 것이다. 물론 그 수단은 이들의 금전적인 영향력에 기반하고 있다.

해외 한인 사회의 현황

2001년 현재 우리는 약 5백7십만 명 정도의 해외교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전에 많은 부분 강제성을 띤 이민의 양상에서 1960년대 들어 인구억제책의 하나로 정부가 취한 적극적인 이민정책의 산물로 많은 이민들이 보다 좋은 기회를 찾아 주로 선진국으로 향해 갔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만 미국에 약 5십만 명 이상의 이민이 이루어졌고, 전체 교포층의 약 80%이상의 미국, 일본, 중국의 삼국에 살고 있는 집약적인 양태를 띠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 20%는 전세계에 골고루 퍼져 있다. 한인들은 전세계 151개국에 퍼져 살고 있으며, 1만 명 이상의 한인이 거주하는 나라는 15개국에 달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10년간 이러한 이민 집단의 크기도 매년 십만 명 가량 증가, 이 기간동안 17% 이상 증가했고, 또한 그 결집 성으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약 2000개가 넘는 각종 한인단체가 결성되어 있다.

이렇듯 남한 인구의 약 15%에 육박하는 해외 이민 사회는 고국에 어떠한 형태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을까? 위에서 언급한대로 경제적인 관계의 심화에 따르는 정치적인 영향력의 확대라는 큰 조류에서 어느 정도 다가서 있는 것일까?

최근 미국의 국제경제연구소에서 출간 된 연구결과를 보면 (Korea Diaspora in the World, 2002, IIE)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수치들이 눈길을 끈다. 먼저, 통계학적으로 볼 때 우리는 한인 이민자의 수가 많은 나라들과의 교역수준이 그렇지 않은 나라들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한인의 수가 100% 증가했을 때 그 나라를 상대로 한 수출은 약 16%, 수입은 약 14% 정도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해외 한인들의 모국으로의 투자형태는 중국과 비교했을 때 극히 미미한 수준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결과에는 정부의 개발정책에서 외국자본의 직접투자를 통제하고 조인트 벤처 등을 통한 소주주의 위치에 만족할 수밖에 없었던 데 그 큰 이유가 있다. 하지만 1997-8년 외환위기 이후로 IT업계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한 교포자본이 직접투자의 형태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다음으로 위에서 강조된 모국으로의 송금을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 많은 개도국들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인도의 경우 2000년 한해에 GDP의 약 2.9%에 달하는 135억불의 송금을 해외로부터 받아들였고, 중국의 경우에도 70억불에 달하는 송금이 해외로부터 보내졌다. 한국의 경우에는 2001년 약 65억불의 송금이 해외로부터 보내져 그 크기에 있어서는 중국과 비슷한 규모이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인도나 중국의 경우 해외로 나가는 송금이 거

의 없는데 비교해서 한국의 경우에는 거의 해외에서 들어오는 금액에 달하는 규모의 돈이 해외로 송금되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2001년에는 약 69억불이 해외로 송금되어져서 이 항목에서 (Current Transfers in the Balance of Payments)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 중 상당부분이 한국에서 일하는 해외노동자들이 모국에 송금하는 돈이지만, 한국에 있어 독특하게 나타나는 특징은 가정이 종종 한국에 돌아와 직업을 가지면서 해외에 교육의 목적상 거주하는 가족에게 송금하는 액수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또한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해외 한인들의 역할은 지금까지 한국경제에 있어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인 듯 보인다. 1950-60년대에 벌어졌던 미국으로의 고급인력유출 현상이 일부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지만 70년대 이후로 이들의 노하우와 지식을 적극적으로 유입하려 한 정책의 결과 상당히 많은 재외 한인들이 실제로 모국으로 돌아오고 있다. 다른 한 예로는 중국의 연변에 거주하는 한인사회가 정보산업단계로 들어선 모국의 값싼 노동력에 대한 수요를 매우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들이 종종 사회문제화 되는 이민 집단의 이질성이 보다 전면적으로 대두되지 않고 있는 이유의 하나가 될 것이다.

한국에 있어서 이민자의 문제는 위에서 보여지듯 다른 산업사회와 다른 몇 가지 특징들로 인해, 언어나 문화가 급격히 섞이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지 않다. 해외교포들의 모국에 대한 경제적인 기여 역시 송금이나 정치적 영향력의 강화보다는 물리적으로 모국에 귀향하는 경향을 띠어 전세계적으로 일반화되어 나타나고 있는 이민들의 정치경제학과는 일면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세계적인 조류가 우리의 이민들에 대한 인식이나 한국 내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적지 않은 해외노동자들의 문제에 좀 더 구조적으로 접근하는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점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참고문헌

- The Economist 2002. Research Surveys on Immigration, Oct 31.
The Economist 2003. A World of Exiles, January 4th .
Bruce Scott 2001. "The Great Divide in the Global Village", The Foreign Affairs. (January/February)
Martin Wolf 2001. "Will the Nation-State Survive Globalization?", The Foreign Affairs (January/February)
Bergsten, Fred and Inbom Choi eds 2002. Korean Diaspora in the World Economy. The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